

2012년 5월 1호

# 재 정 동 향

재 정 지 출 분 석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목 차

I. 국제기구 .....	2
II. 호주(Australia) .....	7
III. 캐나다(Canada) .....	8
IV. 프랑스(France) .....	10
V. 독일(Germany) .....	11
VI. 그리스(Greece) .....	13
VII. 아일랜드(Ireland) .....	15
VIII. 이탈리아(Italy) .....	16
IX. 일본(Japan) .....	18
X. 포르투갈(Portugal) .....	20
XI. 스페인(Spain) .....	22
XII. 영국(UK) .....	23
VIII. 미국(US) .....	25

## 요 약

- 2012년 4월 하반기 국제기구(IMF, OECD)와 주요국(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국제기구 동향
  - IMF는 4월 17일 "World Economic Outlook"과 "Fiscal Monitor"를 발표하고, 과도한 재정긴축으로 인한 하방위험 증가 가능성 지적
  -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IMF 구제금융재원 4,300억달러 확충 합의
  
- 미국·캐나다·호주
  - 미국 상원에서 예산결의안 표결이 결렬되었으며, CBO는 FY2013 대통령예산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발표
  - 캐나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을 도입하고, 호주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 시행
  
- 유럽
  - 영국은 FY2012-13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통제 개선방안 및 인프라투자 비용검토 보고서 발표
  - 이탈리아는 2012-2015 중기재정계획(DEF)을 발표하였고, 독일은 연방내각에서 2012 수정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채택
  - 포르투갈은 EFSM에 18억유로 규모의 네 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아일랜드는 2012년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
  -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통제강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I . 국제기구 재정동향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4)

### □ 세계 전망과 정책

- (최근 동향) 2011년 유로위기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후퇴 이후,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방위험도 여전히 높은 상태
- (선진국) 과도한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중기 재정건전화 및 가계·금융부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공급 필요
- (신흥 및 후진국)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외수요로 인한 경기과열의 적절한 관리 필요

### □ 국가 및 지역별 전망

- (유럽) 2011년 4/4분기에 발생한 재정위기로 유럽전체 경제성장 하락
- (미국) 2011년의 성장동력과 취업시장의 상승세는 긍정적이나 재정적자에 대한 위험 및 주택시장의 악화, 유럽불경기 미국으로의 확대 등의 불안요소 내재
- (아시아) 아시아의 대외적 요건은 부정적이지만 정도는 제한적이고, 탄탄한 대내 수요와 금융시장 안정의 여력이 있기에 전반적인 연착륙 전망(기준선 전망기준)

### □ 가계부채대책

- 최근 부동산 급락은 급증한 가계부채와 함께 더욱 심각
- 장기적인 경제활동 수축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정책 필요
- 정책 사례를 통해 부채상환능력 증진, 가계 채무불이행 감소 등의 정책연구 필요

□ 원자재가격 변동 및 원자재수출

- 원자재수출의 거시경제성과(Macroeconomic performance)는 원자재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짐
- 소규모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원자재가격 변동성에 대한 최적의 재정정책은 경기 역행적 정책(countercyclical policy)

**2. IMF, Fiscal Monitor (2012.4.17)**

□ IMF의 2012.4월 'Fiscal Monitor'에서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의 개념 또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재정조정 범위에 대한 분석을 수행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채비율(debt ratio)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상승하는 등 대체로 재정위험(fiscal risks)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재정정책의 과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 여력 이용과 재정건전화 촉진을 통한 장기 여력 재건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는 것

□ 단기 및 중기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취약하고 정책오류에 대비한 여력(margin)이 거의 없음

- 2015년까지 부채비율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역행위험이 높아 정책 선택지를 제한
-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재정긴축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s)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서 확인됨

□ 부채비율 축소 요구와 의무지출 압박으로 대부분 국가가 장기적 재정여력이 없고 단기적인 유연성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 및 실행이 필수적임

### 3.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 IMF는 구제금융재원 4300억달러 확충 합의

○ 유로존 2000억달러, 일본 600억달러, 한국·영국 150억달러 지원

### 4. OECD

□ OECD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과감한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 발표(2012.4.19)

○ 2050년까지 국가부채를 50% 이내로 감축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2013년에 개선해야 하는 국가별 재정수지 규모 제시<sup>1)</sup>

[그림 2] OECD에서 제시한 2013년 국가별 재정수지 규모



자료: OECD

- 1) OECD가 제시하는 재정수지 개선 필요 규모는 아래와 같은 전제하에 산출된 것임
1. 2013년에 한꺼번에 재정수지를 개선하여 그 수준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가정
2. 현재의 국가부채 및 재정수지만 뿐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의료, 장기요양 등 미래의 재정지출 증가 전망을 함께 고려
3. 경제성장률, 이자율,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등은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고 단순화
4. 상세 내용 참조: [http://www.oecd.org/document/1/0,3746,en\\_21571361\\_44315115\\_50109953\\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1/0,3746,en_21571361_44315115_50109953_1_1_1_1,00.html)

- 유로지역의 재정건전화는 금융시장 상황 등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필요성 언급
  - 취약한 은행의 자본재확충 등의 유럽 지역 금융 부문의 건전성 제고<sup>2)</sup>를 위한 조치들과 구조개혁 정책 시행 촉구

□ 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 CLIs) 발표<sup>3)</sup>(2012.4.10)

-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4개월 연속 상승(전월대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
  - 미국, 일본 및 아일랜드는 경기회복(regained momentum)에 강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음
  - 이탈리아, 프랑스는 경제활동 둔화(continued sluggish activity)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일 및 영국의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potential turning point)

<표 1> 경기선행종합지수 추이

(장기추세치 = 100\*)

Month	2011.10	11	12	2012.1	2	전월비(p)	전년동월비(p)	경기전망
OECD전체	100	100.1	100.2	100.3	100.5	0.2	-0.5	regained momentum
유로지역	99.8	99.6	99.6	99.6	99.6	0.0	-1.9	potential turning point
아시아5개국**	99.3	99.4	99.6	100	100.4	0.4	-0.4	regained momentum
G7개국***	100	100.1	100.3	100.5	100.7	0.2	-0.4	
미국	100.1	100.4	100.7	101	101.3	0.3	0.5	
일본	100.3	100.4	100.6	100.8	101.1	0.3	0.3	
스페인	100.8	100.9	101.0	101.1	101.2	0.1	1.1	
아일랜드	100.1	100.3	100.6	100.9	101.3	0.4	0.6	potential turning point
영국	99.4	99.3	99.3	99.4	99.5	0.1	-2	
독일	99.5	99.3	99.2	99.2	99.2	0.0	-3.1	potential turning point
한국	99.3	99.3	99.3	99.4	99.6	0.2	-0.9	
프랑스	100.0	99.9	99.8	99.7	99.7	0.0	-1.3	continued sluggish
호주	100.0	99.9	99.8	99.7	99.7	0.0	-0.9	
그리스	97.7	97.8	98.0	98.1	98.2	0.1	-0.3	

2) 금융의 가버넌스 체계 개선, 유럽 단일 시장(Single Market) 강화, 상품시장, 노동시장 및 조세시스템 개혁

3) 다음달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12년 5월 10일(목) 발표 예정

(장기추세치 = 100\*)

Month	2011.10	11	12	2012.1	2	전월비(p)	전년동월비(p)	경기전망
이탈리아	99.9	99.7	99.6	99.5	99.4	-0.1	-2.1	activity
포르투갈	98.7	98.3	97.9	97.6	97.5	-0.1	-4.6	
캐나다	99.7	99.7	99.7	99.7	99.7	0.0	-1.1	activity around long term trend

자료: OECD(다음달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12년 5월 10일(목) 발표 예정)

\* OECD는 CLIS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순환국면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① CLIS가 100을 상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확장(expansion), ② CLIS가 100을 상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후퇴·하강(downturn), ③ CLIS가 100을 하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수축·침체(slowdown), ④ CLIS가 100을 하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회복(recovery) 등으로 평가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 포함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 □ OECD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12. 4. 26)

-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더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대 정책 추진을 제안
  - (노동참여확대)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년제도의 단계적 폐지
  - (교육개혁)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어린이집 인증제 강화, 대학 인증제도 개선
  - (서비스업생산성)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제거 및 규제 완화와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
  - (세제개혁) 고용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율은 낮게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환경세, 보유세 등은 간접세로 사회 지출을 조달
  - (사회통합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완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 축소 및 지원금 확대
  - (녹색성장) 탄소가격 부과 등 시장 메커니즘 도입하고 생산비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책정

## II. 호주

### 1. 예산·결산 등

### 2. 기타

□ 호주 연방정부가 고령자 채용기업에 인당 1,000호주달러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sup>4)</sup> (2012.4.18)

○ 올해 7월 1일부터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해 최소 3개월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급될 예정

- 고용장려책은 4년간 총 1,000만호주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웨인 스완(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 '호주인 고령자들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Realising the Economic Potential of Senior Australians: EPSA)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임

-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45-54세 인구의 평균 실직기간은 52주, 55세 이상은 평균 75주 동안 실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4) 시드니모닝헤럴드

### Ⅲ. 캐나다

#### 1. 예산·결산 등

#### 2. 기타

#### □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법(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Act)」 도입(2012. 4. 26.)

- 캐나다 재무부는 2012년 캐나다 예산안의 핵심 정책을 법률로 제정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법」 도입 발표
  - 비즈니스 투자환경 개선
    - 자원개발프로젝트 대상 1사업 1리뷰(One project, one review) 시스템 도입
    - 통신회사 대상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 및 시장 참여기회 확대 지원
    - 실업급여의 근로의욕 감소요인 제거를 통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 보험대상소득 100달러당 5센트로 고용보험료율 상승폭 제한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 건강관련 연방소비세(GST) 및 통합판매세(HST) 경감혜택 확대
    -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저축계좌제(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개선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및 소득보장지원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수혜자격 기준연령 향후 단계적 상향조정
  - 재정수지균형 회복 노력
    -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캐나다 화폐 페니(penny) 발행 연내 중단

□ 책임자원개발(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계획 발표(2012. 4. 19.)

- 캐나다 정부는 주요 자원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리뷰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보호 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책임자원개발 계획 발표
  - 2012년 예산안은 책임자원개발계획 수립시 이에 따라 FY2013-14까지 2년간 1억6,500만캐나다달러 지출 계획
    - 주요 자원개발프로젝트 대상 1사업 1리뷰 시스템 도입
    - 사업평가지 평가단계별 소요기간 계획 수립(setting timelines)
    -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후 실제 환경영향력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 실시

## IV. 프랑스(France)

### 1. 예산·결산 등

#### □ 2011년 사회보장예산(LFSS 2011) 집행결과 발표

- 2011년 사회보장예산 일반재정수지는  $\Delta 174$ 억 유로로 2012년 사회보장예산에 서(LFSS 2012) 예상한 수치인  $\Delta 180$ 억 유로보다는 6억 유로 개선된 수치임
- 이는 건강보험 개혁으로 인한 보건지출 감소와 세입 증가에 기인함

### 2. 기타

#### □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1분기 경제성장률을 0%로 전망

- OECD는 1분기 경제성장률을  $\Delta 0.2\%$ , EC는  $\Delta 0.1\%$ 로 예측한데 비해 중앙은행 은 한결 긍정적인 전망치인 0%를 발표하면서 프랑스가 경기후퇴(recession)에 서 벗어나고 있다고 발표
- 중앙은행은 2분기에 대해서 단기간 경제활동이 안정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회복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함

〈표 2〉 기관별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치

	프랑스 중앙은행	OECD	EC
2012년 1분기	0.0%	$\Delta 0.2\%$	$\Delta 0.1\%$
2012년 2분기	0.2%	0.9%	0.0%
2012년	0.7%	0.3%	0.4%

자료: Le Monde

## V. 독일

### 1. 예산·결산 등

### 2. 기타

□ 연방 내각, 2012 수정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German Stability Programme) 채택 (2012.4.18)

- 2012년 독일은 중기목표(MTO :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인 GDP 대비 구조적 적자 0.5% 미만을 달성할 예정
  - 연방정부의 신규차입은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14년 새로운 한도(new ceiling)인 GDP 대비 0.35% 미만에 도달할 전망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82%에서 안정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6년에는 73%까지 하락할 전망

<표 3> 2012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of GDP-					
revenue ratio	2012	44.7	45	44 1/2	44 1/2	44 1/2	44 1/2
	2011	43	43	43	42 1/2	42 1/2	-
expenditure ratio	2012	45.7	46	45 1/2	44 1/2	44 1/2	44 1/2
	2011	45 1/2	44 1/2	44	43 1/2	43	-
budget balance	2012	-1.0	-1	-1/2	-0	0	0
	2011	-3.3	-2 1/2	-1 1/2	-1	-1/2	-1/2
debt ratio	2012	81.2	82	80	78	76	73
	2011	82	81	79 1/2	77 1/2	75 1/2	-

자료: 독일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 Aktualisierung 2012

□ 육아수당(Betreuungsgeld) 관련, 경제계 반대 및 집권연정 내부 불화(2012.4.17)<sup>5)</sup>

- 최근 독일내 3세미만 아동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부모에게 탁아소 보조금 대신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증가
- 독일 정부는 2009년 연정계약시 기사당의 요구에 의해 '공공기관 이용의 자율적 선택권을 위하여 2013년부터 3세미만 아동의 교육의 대가로 150유로 또는 동 금액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의
- 2011년 11월 기민/기사연합은 전당대회에서 2013년부터 육아수당으로 월 100유로를 지급하고, 2014년부터 이를 150유로로 증액하기로 결의

**<참고> 2012년 독일의 육아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황**

1. **육아보조금(Kindergeld)** : 모든 부모에게 월 184(1명), 190(2명), 215(3명 이상) 유로 지급, 이를 위한 연간 국가 예산은 330억 유로
2. **부모수당(Elterngeld)** : 아이 출산 직후 14개월까지 육아를 위해 직업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이전 수입에 따라 최소 300유로~1,800유로(순수입의 65%~100%)를 국가에서 지원, 이를 위한 국가예산은 약 47억 유로
3. **탁아소(Kitas) 지원** : 현재 독일은 출산장려를 위해 23.1%(서 20%/동 49% 베를린 제외)의 3세미만 아동을 위한 국영탁아소를 운영, 이에 대한 예산은 약 180억 유로이며, 전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시설 예산은 290억 유로

5) 자료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deu.mofat.go.kr), 2012.4.18

## VI. 그리스

### 1. 예산·결산 등

□ 2012년도 1사분기 재정집행 결과 확정 발표<sup>6)</sup> (2012. 4. 20.)

○ 1사분기 그리스의 재정적자 72억 7800만 유로로 확정

- 목표치 85억 9600만 유로 보다 낮은 수치

□ 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11년도 재정적자는 196억 유로 규모로 GDP 대비 9.1%임<sup>7)</sup>

○ 이는 2009년도 GDP 대비 적자율인 15.6%에 비해 개선된 수치

- 그리스는 부동산 세입, 부가가치세 인상,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삭감 등을 통해 적자를 감축해왔음

<표 4> 2008 - 2011년도 재정집행 결과

		2008	2009	2010	2011
GDP	십억유로	232.92	231.642	227.318	215.088
재정수지	십억유로	-22.866	-36.103	-23.521	-19.565
	GDP 대비 %	-9.8	-15.6	-10.3	-9.1
총지출	십억유로	117.963	124.646	114.106	107.769
	GDP 대비 %	50.6	53.8	50.2	50.1
총수입	십억유로	94.833	88.601	90.247	88.075
	GDP 대비 %	40.7	38.2	39.7	40.9
총부채	십억유로	263.284	299.685	329.535	355.617
	GDP 대비 %	113	129.4	145	165.3

자료: 그리스 통계청(ELSTAT)

6) 「State Budget Execution January-March 2012」, Ministry of Finance, 2012.4.20

7) 「Fiscal data for the years 2008-2011」, Hellenic statistical authority, 2012.4.23

## 2. 기타

- 그리스 파파데모스 총리는 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밝힘<sup>8)</sup>  
(2012. 4. 18.)
  - 주요한 이슈는 중소기업 지원, 기간사업 육성, 청년실업의 감소, 민영화, 에너지정책, EU기금의 활용 등

---

8) 출처: 「Letters to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ose Manuel Barroso」  
(<http://www.primeminister.gov.gr/english/2012/04/18/letter-to-the-president-of-the-european-commission-jose-manuel-barroso-2/>)

## VII. 아일랜드

### 1. 예산 · 결산 등

#### □ 재무부 2012년 재정적자 경과보고서 발표 (2012. 4. 23)

- 아일랜드 정부는 2011년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 이하를 달성함에 따라 2012년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하향 조정
  -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2011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GDP대비 10.3%(EU 10.6%, IMF 10.1%)로 0.9%p 감소한 9.4%로 나타남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에(지출삭감, 세율인상) 기인한 것으로 평가, 지속적인 부채감소를 통해 2015년까지 3% 아래를 목표
- 2011년 GDP대비 재정적자가 목표치보다 0.9%p 감소함에 따라 2012년 재정적자 목표 또한 0.4%p 낮은 8.2%로 하향 조정

<표 5> Ireland's underlying deficit 2008-2012

(십억유로, %)

	2008	2009	2010	2011	2012
Status	Final	Final	Final	Half finalised	Planned
기초재정수지 (Underlying balance)	-13,219	-18,519	-17,032	-14,735	-13,055
GDP대비 재정적자 (Underlying deficit as % of GDP)	7.3	11.5	10.9	10.3* → 9.4	8.6* → 8.2

자료: 재무부 Maastricht Returns Information Note 보고서(2012.4.23), GDP 대비 재정적자는 은행에 유입된 부채는 제외된 수치임

\* : 당초 예산안 전망

### 2. 기타

## VIII. 이탈리아

### 1. 예산·결산 등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MEF)는 2012-2015 중기재정계획(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DEF)<sup>9)</sup>을 발표하였음(2012. 4. 20.)
- 공공재정 추이 및 분석(Analisi e tendenze della Finanza pubblica)
  - 2011년 재정수지는 -624억 유로(GDP 대비 -3.0%)로 2010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음
    - 2011년 총지출은 GDP 대비 50.5%(7,986억 유로)로 2010년도에 비해 0.7%감소하였고, 2011년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012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2013년 GDP는 16,269억 유로로 기존 전망치인 16,650억 유로보다 하향 조정되었음

<표 6> 이탈리아 공공재정 결과 및 전망

(단위: 억 유로,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지출	7,984	7,953	7,986	8,090	8,142	8,289	8,474
	(52.5)	(51.2)	(50.5)	(50.9)	(50.0)	(49.6)	(49.1)
총수입	7,157	7,239	7,362	7,819	8,056	8,271	8,468
	(47.1)	(46.6)	(46.6)	(49.2)	(49.5)	(49.4)	(49.1)
재정수지	- 828	- 715	- 624	- 272	- 86	- 18	- 6
	(-5.4)	(-4.6)	(-3.9)	(-1.7)	(-0.5)	(-0.1)	(0.0)
GDP	15,197	15,532	15,802	15,887	16,269	16,728	17,255

자료: 이탈리아 재정경제부(MEF)

\* 2012~2015년 수치는 예측치임

9) 중기재정계획(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DEF)은 공공재정 추이 및 분석(Analisi e tendenze della Finanza pubblica), 국가개혁프로그램(Programma Nazionale di Riforma: PNR),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a di Stabilità dell'Italia: PS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30일까지 유럽집행위원회와 EU자문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출처: <http://www.rgs.mef.gov.it/VERSIONE-I/Finanza-Pu/DEF/2012/>

□ 안정화프로그램(PSC)

- 이탈리아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적 재정적자 해결, 균형예산 달성, 공공부채 감소 등을 주요 목표로 함
  - 2013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0.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고자 함
  - 2012년 안정화프로그램의 2013년 공공부채 목표치는 GDP 대비 121.5%로 2011년 목표치였던 116.9%보다 완화되었음

<표 7> 2011년 및 2012년 안정화프로그램의 주요 경제목표

		(단위: GDP 대비 %)				
	안정화프로그램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2011	1.1	1.3	1.5	1.6	
	2012	0.4	-1.2	0.5	1.0	
재정수지	2011	-3.9	-2.7	-1.5	-0.2	
	2012	-3.9	-1.7	-0.5	-0.1	0.0
공공부채	2011	120.0	119.4	116.9	112.8	
	2012	120.1	123.4	121.5	118.2	114.4

자료: 이탈리아 재정경제부(MEF)

- 균형예산준칙(balanced budget rule) 도입으로 2013년 구조적 재정수지 목표를 GDP 대비 0.6%로 함
  - ('10) -3.6 → ('11) -3.6% → ('12) -0.4% → ('13) 0.6 → ('14) 0.6

□ 국가개혁프로그램(PNR)

- 국가개혁프로그램은 이탈리아 경제성장의 저해요인, 거시경제 불균형 분석, 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음
  -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공공부채이며, 부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함
  - 이탈리아 재정건전화를 위해 규제완화, 조세시스템 개혁, 중소기업 지원, 노동환경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함

## IX. 일본

### 1. 예산·결산 등

□ FY2012 「재정법 제 46조<sup>10)</sup>에 근거한 국민에의 재정보고」 발표(2012. 4. 18.)

- FY2012 예산과 FY2010 결산<sup>11)</sup>의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
- FY2012 예산 파트는 예산 편성의 경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된 경제정세 및 재정정보,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요시책, 예산의 주요내용, 재정투융자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구성

#### <예산 편성의 경위>

날짜	내용
2011.12.24	정부안 각의 제출, 개산 각의 결정 시행
2012.01.24	제 180회 국회 제출
2012.03.08	중의원 가결
2012.04.05	참의원 부결, 양원 협의회 열림 양원 의견 일치되지 않아 같은 날 일본국 헌법 제 60조 제2항 <sup>12)</sup> 전단 규정에 의해 성립

자료 : 일본 재무성 「재정법 제 46조에 근거한 국민에의 재정보고」를 바탕으로 작성

#### <일반회계 예산 규모 및 국내 총생산의 추이>

	일반회계(A) (억엔)	일반회계 內 기초적재정수지 대상경비 (억엔)	국내총생산(C) (명목·조엔)	(A)/(C) (%)	(B)/(C) (%)
FY2011	924,116	708,625	470.1	19.7	15.1
FY2012	903,339	683,897	479.6	18.8	14.3
전년대비	△2.2%	△3.5%	약 2.0%	-	-

자료 : 일본 재무성 「재정법 제 46조에 근거한 국민에의 재정보고」

주 1 : FY2011 의 (A) 와 (B)는 당초예산 계수

2 : FY2011과 FY2012의 (C) 는 FY2012 정부경제전망에 의함(FY2011은 실적전망, FY2012는 전망)

- 10) 재정법 제 46조 : 내각은 예산이 성립하였을 때 즉시 당해 예산, 전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공채, 차입금 및 국유재산의 현재고,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 인쇄물, 강연, 기타 적정 방법으로 국민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 11) KIPF 재정동향 제 2권 제3호의 주요국 재정동향 일본편에 FY2010 결산의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
- 12) 일본국 헌법 제 60조 : 예산에 대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의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중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았을 때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FY2010 정책별 비용 정보 공표(2012. 4. 17.)

- 정책별 비용 정보란 재무정보의 충실을 한층 더 도모하기 위해 부처별 재무서류의 업무비용 계산서에서 형태별로 표시된 비용을 각 부처의 정책평가항목마다 표시한 것
- 정책별 비용 정보에서는 각 부처 개별 정책분야의 비용의 전 대상이 표시되어 있음
  - 행정담당자는 사업비용과 사람·물건에 관련된 비용 비교, 연도별경과 및 타사업과의 비교를 할 수 있고, 비용 의식 양성 및 사업 효율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넓은 정보제공을 실시하여 행정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 촉진이 기대됨

## X. 포르투갈

### 1. 예산·결산 등

#### □ 2012년 1-3월 예산집행결과 발표(2012.4.20)

- 포르투갈 재무부가 발표한 2012년 1-3월 예산집행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41억4천5백만 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재정수지인 55억8천4백만 유로보다 감소하였음
- 이는 전년 동기대비 총수입이 2.4%감소하였으나, 총지출은 4.3%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8> 2012년 1-3월, 포르투갈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 유로)

	3월까지 예산 집행결과		
	2011년(1월-3월)	2012년(1월-3월)	증감율
총수입	14,875.7	14,515.9	-2.4
총지출	14,317.3	14,930.4	4.3
총 재정수지	558.4	△414.5	

자료: 포르투갈 재무부(Fonte: Ministerio das Financas), "Central Government and social Security Consolidated Account",

#### □ 2011년 재정 수지 및 공공 부채 비율, 포르투갈 중앙은행 발표(2012.4.23)

- 공공부채는 1,843억 유로로 GDP 대비 107.8%이며, 이는 전년도 1,611억 유로 GDP 대비 93.3%보다 증가한 수치임
- 재정적자는 720억 유로로 GDP대비 -4.2%이며, 이는 전년에(2010년, 1,700억 GDP대비 -9.8%) 비해 개선된 수치임
- 재정수입은 GDP대비 44.7%로 2010년, 41.4%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재정지출은 GDP대비 48.9%로 2010년, 51.3% 비해 감소

<표 9> 2011년 포르투갈 재정 수지 및 공공 부채

(단위: 백만 유로,%)

	2008	2009	2010	2011
GDP(백만유로)	171,983	168,504	172,670	171,015
재정적자(백만유로)	-6,236	-17,103	-16,950	-7,262
재정적자(% of GDP)	-3.6	-10.2	-9.8	-4.2
재정지출(% of GDP)	44.8	49.8	51.3	48.9
재정수입(% of GDP)	41.1	39.6	41.4	44.7
공공부채(백만유로)	123,108	139,945	161,135	184,291
공공부채(% of GDP)	71.6	83.1	93.3	107.8

자료: 포르투갈 중앙은행 Statistical Bulletin of Banco de Portugal and in BP Statistics Online.

## 2. 기타

- 유럽금융안정화 기금(EFSM)으로부터 18억 규모의 네 번째 구제금융 신청, 포르투갈 재무부 발표(2012.4.24)
  - 4월 한 달 동안 포르투갈 정부는 IMF와 유럽금융안정화 기금(EFSM)을 통해 각각 52억 규모와 18억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

<표 10> 2012년 4월 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현황

(단위: 백만 유로,년,%)

	거래일	만기일	평균만기	금액	금리
IMF	2012년4월12일	2022년4월30일	7,25	5.210	변동금리
EFSM	2012년4월24일	2038년4월04일	26	1.800	3,375%

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정부 부채기관 (Portuguese Treasury and Government Debt Agency)

- 3월말 실업자 전년동기대비 19.8%가 증가, 포르투갈 통계청 발표(2012.4.14)
  - 올해 3월 말 등록되어 있는 실업자는 661,40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8%가 증가함
  - 3월 한 달간 신규로 등록된 실업자는 65,429명으로 올해 2월보다 8.6% 증가함

## XI. 스페인<sup>13)</sup>

### 1. 예산·결산 등

□ 적자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중앙정부 통제 강화\*

- \* 재무부 보도 중 Antonio Beteta 공공부문 차관(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Administration) 발표내용 (2012.4.18)
- Beteta 차관은 예산안정법(Budgetary Stability Act)에 따른 회계투명성과 예산 균형원칙을 재확인
- 공공부문에 대해 예산안정법을 원칙에 따라 강제하고, 재정기본법(Organic Law on Budgetary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규정에 의거 의무위반 자치지역에는 “필요시 정부개입” 경고
  - 자치지역(Autonomous Community)은 재정긴축 계획을 마련하여 4월 30일까지 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 자치지역의 적자는 지출삭감 약 60억 유로와 세입인상 약 45억 유로를 통해 총 104억 유로 감축될 계획
- 한편 재정긴축으로 인한 자치지역의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extraordinary Payment Plan Mechanism\*” 확대
  - \* 특별지급제도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각 공공부문의 민간 지급의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된 민간자본 상환제도. 초기에는 “local authorities”에 적용하였으나 이를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s)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3개 지역을 제외한 14개의 지방정부가 특별지급제도에 참여를 확정
  - 지방정부에 대한 채권이 있는 공급자(supplier)는 신청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으며 14개 자치지역에 제공되는 총 상환규모는 173억 유로임

### 2. 기타

13) 자료출처: 스페인 재무부 영문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iciasingles.aspx>

## XII. 영국

### 1. 예산·결산 등

□ FY 2012-13 본세출예산안 (2012. 4. 19.)<sup>14)</sup>

- 본세출예산안에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총 지출은 5,206억파운드이며, 약 2,741억파운드의 지출은 비의결 지출에 해당함
  - FY2012-13의 지출 승인 요청 규모는 FY2011-12에 비해 45억파운드 정도 감소
  - 의결대상 지출은 부처별 지출한도(DEL) 약 3,133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 약 1,506억파운드, 비예산(Non-budget) 약 566억파운드로 구성
  - 현금주의로 조정된 순현금소요액은 약 4,580억파운드 규모임

<표 11> 2012년 본세출예산안 요약

	의결	비의결	합계(십억파운드)
자원(Resource) 부처별지출한도(DEL)	274.8	68.4	343.2
비제한 DEL (Non ring-fenced DEL)	258.3	66.8	325.1
행정예산(administration budgets)	14.4	0.1	14.5
자본 DEL	38.5	4.7	43.2
자원 연간관리지출(AME)	142.2	132.3	274.5
자본 AME	8.4	1.8	10.2
비예산(Non-budget)	56.6	-	-
순현금소요액(Net Cash Requirement)	458.0	-	-

출처: HM Treasury, 2012 Press notices

14) 참고 : 「Central Government Main Supply Estimates 2012-13」, 영국 재무부, 2012. 4.  
([http://www.hm-treasury.gov.uk/main\\_supply\\_estimates\\_2012\\_13.htm](http://www.hm-treasury.gov.uk/main_supply_estimates_2012_13.htm))

## 2. 기타

### □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통제(spending control) 개선 방안 발표 (2012. 4. 23.)<sup>15)</sup>

- 재무부는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지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우선순위, 가이드 라인을 설정함
  - (지출 모니터링) 정확한 자료와 신뢰할 만한 추정을 통해 적기에 올바른 정보 제공
  - (지출 관리) 공공기금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비상시 계획, 우선순위 조정, 예비비 및 부처별 현금 관리 강화 등 추진
  - (거버넌스 및 감독) 재정 리스크 수준에 따라 부처별 기금 지출 권한 위임, 예산 담당장관-주요 지출 부서 회담, 감사원(NAO)과 감독 공조 등

### □ 인프라투자 비용 검토 보고서 발표(2012. 4. 23.)<sup>16)</sup>

- 비용검토 시행 결과, 2011년 약 15억파운드의 지출 절감 효과를 달성함
  - 인프라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검토 프로그램<sup>17)</sup>(Infrastructure Cost Review programme, 2011.3.)의 첫 연차 보고서로 2011년은 인프라 사업의 비효율 요인 제거에 초점
- (평가 기준) 비용검토 원칙 적용여부, 정부·고객·계약자의 행동 및 절차 개선 등
- (성공 사례) 항목별 목표와 전략적·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사례 제시
  - 민관 인프라 현장, 산업 표준 그룹(Industry Standard Group) 구성,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공급망 개선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정부조달 프로세스 개선안(Procurement routemap) 등

15) 참고 : 「Improving Spending Control」, 영국 재무부, 2012.4.

([http://www.hm-treasury.gov.uk/improving\\_spending\\_control.htm](http://www.hm-treasury.gov.uk/improving_spending_control.htm))

16) 참고 : 「Infrastructure Cost Review :annual report 2011-12」, 영국 재무부, 2012.4.

([http://www.hm-treasury.gov.uk/press\\_32\\_12.htm](http://www.hm-treasury.gov.uk/press_32_12.htm))

17) 2015년까지 연간 2~3십억 파운드의 인프라 투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 XIII. 미국

### 1. 예산·결산 등

□ 미 상원 예산결의안 표결 결렬(2012.4.18)

- 이에 앞서 3월 29일 예산안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은 하원통과

□ CBO, FY2013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2012.04.20)  
(The Economic Impact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 전반기(2013~2017)에는 GDP성장세를 보인 후 후반기(2018~2022)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
  - 2013~2017 누적적자: 3조달러 ~ 3.2조달러 전망
  - 2018~2022 누적적자: 3.3조달러 ~ 3.6조달러 전망

### 2. 기타

□ 미 재무부 부실자산완화 프로그램<sup>18)</su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비용추계 보고서 발표(2012.4.13)

- 부실자산완화 프로그램 관련하여 재무부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정책협력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다룬 보고서

- (주요내용)

- ① 총비용추이: 2009년 8월 ~ 2012년 4월 비용추이는 3,410억달러 → 600억 달러로 감소 전망
- ② 880만명의 일자리 감소했으나, 410만명의 일자리 재창출 효과 발생
- ③ 가계자산(Household Wealth) 규모: 19.2조 달러 손실 (2011년 달러기준)

---

18) TARP Financial Stabilization Package는 2008년 10월 3일에 제정되었음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2012.4.25)

- (2012년 경제성장률) 1월전망: 2.2%~2.7% → 4월 전망: 2.4%~2.9%
- (2012년 실업률) 1월전망: 8.2%~8.5% → 4월 전망: 7.8%~8.0%